

태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5.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 의견	12

I. 일반개황

국명	태국 (Thailand)	수도	방콕 (Bangkok)
면적	513천 km ² (한반도의 2.3배)	GDP	4,558억 달러 (2017)
인구	69.1 백만명 (2017년)	1인당 GDP	6,596달러 (2017)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Baht (Bt)
대외정책	친서방중립	환율(달러당)	33.9 (2017)

-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태국은 북서쪽으로 미얀마, 북동쪽으로 라오스, 동쪽으로 캄보디아, 남쪽으로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ASEAN 국가 중 인구 4위, GDP 규모 2위인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경제국으로 전자제품, 자동차 등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열대성 기후의 연중 휴양지로 청정해안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음.
- 2014년 반정부 시위에 뒤이은 군부 쿠데타로 과도정부가 구성된 상태이며, 군부는 헌법 개정 후 총선 실시를 통해 민정이양 계획을 밝혔으나 총선 일정은 계속 연기되고 있음.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2016년 서거하면서 아들인 마하 와치랄롱꼰이 국왕으로 즉위하였음.
- 대외적으로는 ASEAN 및 아세안자유무역협정의 중심 국가이며, 양자 및 다자간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구분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
경제성장률	2.7	1.0	3.0	3.3	3.9	3.9
소비자물가상승률	2.2	1.9	-0.9	0.2	0.7	1.4
재정수지/GDP	-2.2	-2.0	-0.4	-2.7	-2.5	-2.3

자료: IMF, EIU

□ 2018년 서비스 수출 확대에 기인한 경제성장 지속 전망

- 태국은 2012년 정부 재정지출 확대,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7.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성장률은 계속 둔화되었음. 특히 2013년 11월 이후 지속된 반정부 시위와 2014년 5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따른 정정불안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2014년 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16년에는 관광 호조, 정부의 세계 우대로 인한 민간소비 촉진 등으로 3.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도 재화 및 서비스 수출 증대, 민간소비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3.9%의 성장세를 나타냈음.
- 2018년 이후에는 서비스 수출 증가,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3%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임금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및 정치 불안 등이 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IMF의 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18~'22) : 3.7%
 - 동남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18~'22) : 베트남 6.5%, 인도네시아 5.5%

□ GDP 대비 2%의 재정적자 수준 지속

- 태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8년에도 GDP의 2.3%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현 군사정부는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각종 세제 정비를 시행하고 있음.

- 2016년 2월에는 최초로 상속세법이 발효되었으며, 2017년 9월에는 주류, 담배, 음료수 및 자동차에 적용되는 신소비세법이 발효되었고, 2019년 1월에는 개정된 재산세법이 적용될 예정임.

<표 2> 태국 주요 세법 개정 내용

분류	주요 내용	발효시기
상속세법	1억 바트 이상 자산 상속시 10% 부과 (단, 부모나 자식이 상속인인 경우 5% 부과)	2016년 2월
신소비세법	주류, 담배, 음료수(당분 음료, 커피, 차) 및 자동차를 대상으로 소비세 인상	2017년 9월
재산세법	주택, 토지 등의 평가액 기준으로 세금 부과	2019년 1월

□ 2018년 1%대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 전망

- 태국은 자연재해에 따른 식료품 등의 가격 변동,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등이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침. 2016년에는 원유 및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2%에 그침.
- 2017년에는 식료품 물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폭 증가한 0.7%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이후에는 국내수요 활성화로 물가상승률은 1%대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2. 국제 경제

<표 3> 주요 국제경제 지표

구분	단위: 백만 달러,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
경 상 수 지	-4,861	15,224	32,113	48,237	48,429	49,768
경상수지/GDP	-1.2	3.7	8.0	11.7	10.6	10.4
상 품 수 지	396	17,201	26,798	36,539	32,336	31,930
수 출	227,455	226,624	214,046	214,251	235,427	253,986
수 입	227,416	209,422	187,248	177,719	203,091	222,056
외 환 보 유 액	161,328	151,253	151,266	166,157	174,692 ^{주)}	-
총 외 채 잔 액	141,902	140,128	131,429	138,129	145,129	152,229
총외채잔액/GDP	33.8	34.5	32.9	32.3	31.8	31.4
D. S. R.	6.3	4.6	6.0	6.1	5.7	6.1

주: 2017년 3월말 기준

자료: IMF, EIU, OECD.

가.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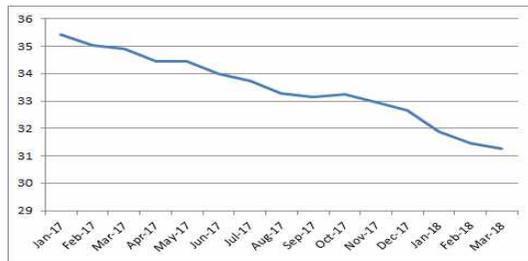
□ 서비스 수지 확대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지속

- 태국은 수입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로 2014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6~17년에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지 확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각각 GDP의 11.7%, 10.6%를 기록함.
-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 관광객 증가세 둔화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 IMF의 태국 경상수지/GDP 전망치(%) : 9.3('18) → 8.6('19) → 7.9('20)

□ 달러당 바트화 환율 하락세 지속

- 달러당 바트화 환율은 2016년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서거 등으로 급등 하면서 연중 평균 환율이 35.3바트 수준까지 상승하였음.
- * 환율 추이(연중평균, 달러당 바트) : 32.5('14) → 34.2('15) → 35.3('16)
- 2017년에는 달러당 바트화 환율 하락이 지속되면서, 태국 재무부는 바트화 강세와 인플레이션 둔화를 우려하며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였으나,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성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동결*하였음.
- * 태국 중앙은행은 2015년 이후 정책금리를 1.5%로 동결하고 있음.
- 2018년에는 달러화 약세 흐름이 이어짐에 따라 달러당 바트화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미국의 세제 인하 및 긴축적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연중 평균환율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월평균 달러당 바트화 환율 추이('17.1월~'18.3월)



□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및 달러당 바트화 환율 하락 등으로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외환보유액은 2017년말 사상 최고치인 1,750억 달러에 달하였음.

나. 외채상환능력

□ 총외채 지속적 감소 및 대외지급능력 양호

- 태국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외채상환과 정부의 신중한 외채관리정책에 힘입어 GDP 대비 외채규모가 1998년 93.8%에서 2017년 31.8%*까지 감소하였음.
- * 2017년 기준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 38.9%
-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비율은 단기외채잔액 감소 및 외환보유액 증가로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D.S.R.O.도 5.5%를 기록하는 등 대외 지급능력이 양호한 편임.
- *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추이(%): 38.4('13) → 37.3('14) → 34.4('15) → 32.4('16) → 30.8('17)

3.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높은 대외경제 의존도로 대외 변동성에 취약

- 태국은 ASEAN 회원국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이어 수출규모 3위인 수출주도형 국가로, 2016년 기준 GDP 대비 총수출이 약 69%(우리나라 42%)에 이르러 대외 경기변동에 취약한 구조임.

- 또한 자동차, 전자산업 등 주요 산업분야의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글로벌 기업의 전략 변화 등에 큰 영향을 받음.

□ 노동자 부족 및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지속적 임금 인상이 성장 저해

- 태국은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이 경제성장의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미얀마 노동인력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임금 관련 포퓰리즘 정책이 시행되어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잉락 친나왓 전 총리의 총선 공약 이행으로 2013년 171~221바트 수준의 일일 최저임금을 300바트로 인상하였으며, 2018년 4월에는 5년만에 최저 임금 인상을 단행하여 1일당 325바트로 상승함.
- o 노동력 부족 및 지속적인 임금 인상으로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으며 노동집약적 산업이 인근 동남아 국가로 이전함. 게다가 체계적인 고등 교육체계 미비로 고급 인력이 부족하여 노동집약 산업을 대체할 고수익 산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실정임.

나. 성장 잠재력

□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 o 태국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타 아세안 국가들에 비하여 외국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여건 평가(Doing Business 2018)에서 태국은 190개국 중 26위*로, 전력수급(13위), 투자자보호(16위)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함.
- * 동남아 주요국 기업경영여건 순위: 말레이시아(24위), 인도네시아(72위), 필리핀(113위)
-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2017~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 태국은 137개국 중 32위를 기록했으며, 거시경제환경(9위), 시장규모(18위), 상품 시장효율성(33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함.

□ 관광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 o 태국은 열대성 기후의 연중 휴양지로 청정해안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관광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음. 태국의 관광산업은 경제 규모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음.
- o 2000년 이후 관광객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인해 2014년에는 전년 대비 6.5% 감소하였음. 이후 2015~17년에는 관광객 수가 각각 20.4%, 8.9%, 8.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음.
- * 태국 관광객 수: 2,481만명('14) → 2,988만명('15) → 3,259만명('16) → 3,538만명('17)

- 태국 관광산업 호황의 주요 원인은 중국 관광객 증가로, 2012년 이후 말레이시아 관광객을 제치고 최대 방문객이 됨(2017년 방문객수 980만명).

다. 정책성과

□ 동부경제회랑(ECC) 개발 계획 추진

- o 태국 정부는 2017년 '동부경제회랑(EEC: East Economic Corridor) 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1년까지 1.5조바트(약 4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13,285km²에 해당하는 동부해안지역을 현재의 제조업 공업단지에서 최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목적임.
- 특히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경제를 살려야하기 때문에, 동 개발계획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
- o 태국 정부는 동부경제회랑 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행정적 절차를 단축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태국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표 4> 동부경제회랑(EEC) 개발계획 개요

구 분	내 용
기 간	- 2017~21년
총규모	- 1.5조 바트(약 430억 달러)
목 적	- 태국 동부해안지역을 최첨단 산업단지로 변모
주요내용	- 차츄사오주·춘부리주·리옹주 등 세 지역에 최신 인프라를 정비하고, 여기에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관광, 바이오테크, 음식, 로봇, 항공, 바이오연료, 디지털, 의료 등 10대 첨단산업 육성
승인 프로젝트	- 우타파오 국제공항 리모델링, 국제공항철도 개발, 램차방 항구 정비 등
규제완화	- PPP(민관합작투자사업) 인허가 절차 기간: 8~10개월로 단축 (기존 24개월) - 법인세 면제기간: 15년으로 연장(통상 8년) - 토지 임대기간: 최장 99년까지 인정 - 원자재와 기계 등 수입품에 무관세 - 국가경쟁력기금 설치하여 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타	- 동 개발계획을 헌법이 규정한 '20년 국가전략'에 포함시키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EC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총리가 직접 맡음

<그림 2> 동부경제회랑(EEC) 개발계획 지도

Thailand's Eastern Economic Corridor



□ 태국 4.0(Thailand 4.0) 정책 추진

- 태국 정부는 '태국 4.0(Thailand 4.0)' 정책을 통해 2036년까지 1인당 국민 소득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첨단기술 부재, R&D 투자 부진, 숙련 노동자 부족 및 지속적인 임금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상실을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로봇·의학·항공·바이오연료 등 10개 분야를 혁신 산업으로 규정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음.

III. 정치 · 사회 동향

1. 정치 안정

□ 반정부 시위에 뒤이은 군부 쿠데타로 과도정부 구성

- 2013년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전 총리가 친오빠인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 등 정치사범 사면을 위한 법안 통과를 강행한데 대해 민주당(야당) 세력이 반발하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음.
- 정부는 2014년 1월 22일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의회를 해산하고 동년 2월 2일 조기총선을 실시했으나, 반정부 시위대의 반발로 정상적인 선거가 시행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총선무효 판결이 내려지는 등 불안정한 정국이 지속됨.

- 2014년 5월 22일 태국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경찰과 군부로 구성된 국가 평화질서위원회(NCPO*)를 발족한 이후, 국왕의 승인을 받아 2014년 9월 프라웃 찬오차(Prayuth Chanocha) 총리를 필두로 한 과도정부를 출범하고,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를 통제함.

* NCPO: National Committee for Peace and Order

- 군부는 2년여의 준비 끝에 2016년 8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을 시행하였으며, 동 헌법은 2017년 4월 발효되었음. 군부는 헌법 개정 후 총선 실시를 통해 민정이양 계획을 밝혔으나, 총선 일정은 계속 연기되고 있음.

□ 잉락 전 총리 탄핵 및 벌금형

-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는 2011년 총선에서 농민 소득증대와 부채 탕감을 위한 고가 쌀 수매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실제로 집권 후 시장가격보다 최대 50%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해 농민들의 큰 지지를 받음.
- 그러나 재정에 한계에 부딪히자 태국 정부는 2014년 2월 쌀 보조금 제도를 종료하였으며, 이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시위와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정정불안이 발생함.
- 잉락은 2015년 1월 쌀 수매와 관련한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을 받아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되었으며, 2016년에는 이와 관련하여 350억 바트(약 1조 1,00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음.

□ 푸미폰 아둔야땃 국왕 서거

- 2016년 10월 서거한 푸미폰 아둔야땃(Bhumibol Adulyadej) 국왕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쿠데타 등 현실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이후 2016년 12월 아들인 마하 와치랄롱꼰(Maha Vajiralongkorn)이 태국 국왕으로 즉위하였음.

2. 사회 안정 (소요사태)

□ 군부 통치 하에 반군부 운동 본격화 조짐

- 2014년 쿠데타를 선언한 군부는 5인 이상이 모이는 정치 집회 및 정당 활동을 중단시킨 바 있음. 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 조치가 금년 6월부터 해제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반군부 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정치 집회가 금지된 상태임에도 총선 일정 지연에 대한 항의 및 군정 최고기구인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 해체를 촉구하는 시민 집회가 간헐적으로 열리고 있음.
- 2018년 5월에는 군부 집권 4년차를 맞이해 정치시민 단체와 학생 등이 조기 총선 실시와 민정이양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린 바 있음.

3. 국제 관계

□ 인접국과의 관계 강화

-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간 평화,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ASEAN 및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ASEAN Free Trade Area) 창설에 참여하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함.
- 또한, 태국은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과 2015년 12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를 출범하였으며, 상품 관세 철폐, 투자 규제 철폐,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회원국 간 경제정책의 조정을 통한 지역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통한 무역확대 추진

- 태국은 FTA 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통한 무역 확대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특히, 탁신 정부 이후 소규모 경제권 위주의 FTA 추진에서 탈피하여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를 추진 중임.
- 인도, 호주, 뉴질랜드, 페루, 일본, 칠레와 양자간 FTA 협정을 기체결했으며, 태국이 속한 ASEAN은 중국, 한국, 홍콩('19.1.1자 발효 예정) 등과 다자간 FTA 협상을 기체결하였음.
- 현재는 미국, BIMST-EC*와 FTA 추진 중이며, EU는 태국 군사정권에 대한 외교적 제재로 태국과의 FTA 협상을 연기한 바 있으나, 2017년 12월 EU는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태국과의 모든 정치적 관계를 복원하기로 함에 따라 2018년중 FTA 협상 재개 예정임.

* BIMST-EC: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경제협력체

- 또한, ASEAN은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와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위해 협상중임.
-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와의 영토분쟁 지속

- 2013년 11월 국제사법재판소는 프레아 비헤아르(Preah Vihear) 사원 주변 지역에 대해 캄보디아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태국 군병력 철수를 명령함.
-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 부근의 동 사원 주변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100년 이상 갈등을 지속해 옴.
- 판결 이후 태국 민족주의 세력의 시위, 비상사태 선포 등으로 인해 정국 혼란이 확산된 바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관리능력 양호

- 2017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들로부터의 금융지원액 77.9억 달러 (단기 42.6억 달러, 중장기 35.3억 달러)가 있으며, 연체금액은 없음.

2. 국제시장평가

□ OECD,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기존 등급 유지

- 군부 통치로 인한 정치 불안 지속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 및 양호한 외채 상환능력 등을 반영하여 기존 등급을 유지함.

<표 5>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17. 6)	3등급 (2016. 6)
Moody's	Baa1 (2017. 7)	Baa1 (2014. 6)
Fitch	BBB+ (2017. 6)	BBB+ (2016. 7)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58. 10. 1 수교 (북한과는 1975. 5. 8 수교)
- **주요 협정:** 무역협정('61), 항공협정('68), 이중과세방지협정('77), 과학기술 협력협정('85), 투자보장협정('89), 해상운송협정('02), 문화교육협정 ('04), 한-ASEAN FTA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 발효('10.1.1)
- **해외직접투자현황:** 2017년말 누적 기준 2,536백만 달러(1,037건)
- **교역규모**

<표 6>

한·태국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주요 품목
수 출	7,599	6,362	6,482	7,467	철강판, 반도체, 합성수지
수 입	5,345	4,854	4,563	5,205	반도체, 컴퓨터, 임산부산물
교역규모	12,944	11,216	11,045	12,672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태국은 재화 및 서비스 수출 증대, 민간소비 확대 등으로 2017년 경제 성장률은 전년(3.3%) 대비 상승한 3.9%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이후에도 3%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 군사정부는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각종 세제 정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수입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지 확대에 힘입어 2014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14년 반정부 시위에 뒤이은 군부 쿠데타로 과도정부가 구성된 상태이며, 군부는 헌법 개정 후 총선 실시를 통해 민정이양 계획을 밝혔으나 총선 일정은 계속 연기되고 있음. 한편,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2016년 서거 하면서 아들인 마하 와치랄롱꼰이 국왕으로 즉위하였음.

- 대외적으로는 ASEAN 및 아세안자유무역협정의 중심 국가이며, 양자 및 다자간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EU는 태국 군사정권에 대한 외교적 제재로 태국과의 FTA 협상을 연기한 바 있으나 2018년중 FTA 협상 재개 예정임.
-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외채상환과 정부의 신중한 외채관리정책에 힘입어 GDP 대비 외채규모가 2017년 31.8%까지 감소하였으며, 외환보유고 증가 등으로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한 편임.

조사역 이세린 (☎02-6255-5717)
E-mail: srlee@koreaexim.go.kr